
목 차

입법조사처

1. 공공외교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2. 우리나라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 현황
3. '공공외교 기본법'제정 검토

예산정책처

1. 공공외교의 개념
2. 공공외교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도서관

1. 미국의 공공외교 관련 입법례
2. 일본의 공공외교 관련 입법례
3.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문제점 및 활성화 관련 언론보도 기사(2012년도)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유 응 조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질의 요지

- 주요부처 국가별 분야별 공공외교 수행현황
- 부처 간 중복 및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 가칭 공공외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회답일 2012.08.16)

■ 조사·분석 방향

- 공공외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는 공공외교를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로 개념화함
-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제는 협의적으로는 외교통상부 사업을 중심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
 - 후자의 관점에 의거할 경우 각 행정부처가 진행하는 몇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화 및 민주화와 정보화 심화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 맥락에서 공공외교기본법 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지원에 의거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문화외교이며 이는 공공외교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둘째, 문화외교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함
 - 셋째, 공공외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화외교 편향의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넷째, 공공외교에 대한 복합외교론 적인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외교통상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여섯째,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 공공외교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1) 공공외교의 개념

- 외교(diplomacy)란 용어는 '외교정책' 또는 '교섭'이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외교란 협상에 의하여 국제관계를 다루는 일이며 국제관계가 대사나 사절에 의하여 조정·처리되는 방법이며 외교관의 업무 또는 기술"1)을 의미함
- 한편 외교를 협의적으로 이해하면 정부가 관리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국제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의 방법이나 기술로 이해되기도 함
- 이 같은 구분에 의거할 경우 외교에 대한 협의적 이해방식이 '전통적 외교'에 속함. 즉 ;전통적 외교(traditional diplomacy)'는 '정부 대 정부'의 행위에 속함
- 이에 반해 공공외교는 그 주체나 대상의 측면에서 전통적 외교와 구분됨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령 1953년에 출범하여 1999년까지 미국 공공외교를 담당해오던 '미국해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이하 USIA²⁾)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외국의 국민을 이해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 시민/기관과 상대국의 시민/기관과의 대화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함³⁾
- 1990년 'Communicating With the World'를 집필한 Hans N. Tuch는 공공외교를 "미국과 타국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해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 노력"이라고 정의함⁴⁾
- 또한 미국 케네디 정부에서 USIA의 책임자로 일하던 Edward R. Murrow는 공공외교를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부기구나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도 목표로 삼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라고 했음⁵⁾

1) Oxford English Dictionary 참조

2) 미국 해외공보처는 1999년 이후 미국무부에 통합됨

3) 미국 해외공보처 전임자협회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org) 참조

4) 미국 해외공보처 전임자협회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org) 참조

5) Mark Leonard, Public Diplomacy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2002), p.1.

- 결국 공공외교는 전통적인 외교와 달리 그 대상이 외국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및 일반 개인도 포함됨 한편 공공외교는 외교대상 뿐만 아니라 외교주체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외교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
- 가령 Jan Melissen에 따르면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 및 단체인 UN, EU또는 Green Peace와 같은 NGO등도 가능함⁶⁾
-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는 공공외교를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로 개념화함⁷⁾
- 이에 따라 공공외교의 핵심 내용을 "타국 대중과의 소통, 이해의 증진, 국가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 제고, 소프트파워(Soft Power) 증진 등으로 이해함

2)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 우리나라 공공외교는 협의적으로는 외교통상부 사업을 중심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광의적으로는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부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
- 후자의 관점에 의거할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이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가령 외교통상부는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을 포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차원의 사업을 펼치고 있음. 또한 교육과학부는 해외교육사업을 통해 이 같은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음

6) Jan Mellissen, "신공공외교: 이론과 실제", Jan Mellissen 편, 『신공공외교: 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 박종일/박선영 역, (서울: 인간사랑, 2005), p. 45.

7) 외교통상부 웹페이지 참조

<http://www.mofat.go.kr/trade/cultural/public/index.jsp?mofat=001&menu=m_30_170_100>

2. 우리나라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 현황

- 우리나라 공공외교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에 중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첫째,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예술교류협력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의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문화예술교류협력 사업은 국가 간 문화행사 교류미진지역 대상 문화예술교류 사업 등 문화예술교류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한편 해외문화홍보원은 우리문화의 해외소개 및 교류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둘째,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적교류사업의 중복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요 국가의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문화계 인사와의 인적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비록 양 기관의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인사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되는 측면도 있으나 문화계 인사도 사회 지도층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중복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셋째,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는 한글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교를 설립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외국인 대상 한국어 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 또한 한국어 교육대상이 차이가 있어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 자체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넷째,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국가 간 수교 기념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는 국가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국가와 정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종합외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국가 간 수교를 기념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비록 양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대상국가의 측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다섯째,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각 부처의 사업에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는 한국영화의 재외공관 상영과 해외 여론주도층 대상 한식 홍보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드라마 해외방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을 통해 한류진흥을 위해 쌍방향문화교류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문화홍보원은 한류영상물의 해외 방영을 지원하고 한류 거점별 한국 문화·관광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 사업은 차이가 있으나 한류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3. '공공외교 기본법'제정 검토

-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제 대에서 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2009.7.7)(이하 A안),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2011.11.9)(이하 B안),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2011.9.16)(이하 C안) 등임
- 이 같은 법안들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음
 - A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부처별로 분산화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B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관점임
 - C안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처의 국제문화교류 또는 문화외교 사업

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는 국무총리실 산하 '문화외교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 법안들은 공공외교의 한 범주인 문화외교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각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분산화된 공공외교활동이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 '공공외교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공공외교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는 이를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관련 사항임
-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외교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지원에 의거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문화외교이며 이는 공공외교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활동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측면이 없지 않음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활동은 결국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는 외교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외교라는 맥락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외교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둘째, 문화외교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함
 - 공공외교에 포괄되는 문화외교는 외교활동의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라는 전문화된 영역이기도 함
 - 따라서 공공외교 조직 및 운영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셋째, 공공외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화외교 편향의 문제를 극복해야 함
 - 최근에 행정부처간 갈등발생의 이면에는 공공외교의 포괄성을 간과하고 이를 문화외교와 동일시하는 이해방식이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극복한 공공외교정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공공외교에 대한 '복합외교론(complex diplomacy)'적인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10년부터 외교통상부 내에서 '복합외교론'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복합외교론은 외교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수단의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외교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에 속할 수 있음
 - 따라서 통상외교, 재일동포정책, 공적개발원조 정책, 국제평화활동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외교통상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세계화와 민주화 및 정보화의 심화로 인해 국제협력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이 같은 경향에서 공공외교를 비롯한 국제협력 업무를 외교통상부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업무는 국익에 기반한 외교전략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외교통상부의 기능과 역할이 불가피함
 -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좀 더 활성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행정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 맥락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공공외교관련 정책 기획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한 일원화된 보고서(외교통상부 주관)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공공외교의 개념과 예·결산 현황

정 문 종 과 장

정 진 욱 분석관

I. 공공외교의 개념

- 공공외교란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교육, 문화, 예술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외교활동임
 - 외국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 미디어, 강연, 연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포함
 - 최근에는 내국민에 대한 정책홍보 화룡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공공외교(대내 공공외교)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II. 공공외교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공공외교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외교통상부 일반회계에 공공외교역량 강화 사업이 있음
 - 동 사업은 2011년까지 외교홍보역량강화 라는 명칭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2년도 예산부터 사업명이 공공외교역량강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동 사업의 예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86.2%, 2010년도에 90.7%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2011년도에는 예산액 5억 5,500만원에 전용 증액된 600만원을 합친 5억 6,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00.9%의 집행률을 나타냈음

[표 1] 공공외교역량강화 사업 예·결산 현황: 2008~2012년

(단위: 백만 원, %)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08	외교홍보역량강화	200	0	200	198	0	2	99
2009	외교홍보역량강화	341	-47	294	294	0	0	86.2
2010	외교홍보역량강화	528	-26	502	479	0	23	90.7
2011	외교홍보역량강화	555	6	561	560	0	1	100.9
2012	공공외교역량강화	793	-	793	416	-	-	52.5

주: 2012년 집행액 및 집행률은 7월말 기준임

자료: 외교통상부

[표 2] 2012년도 공공외교역량강화 사업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계	793
	142
○ 퍼블릭아웃 리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외교부 견학 : 12백만 원 ▪ 학교방문강연 : 20백만 원 ▪ 홍보물 제작 : 70백만 원 ▪ 기념품 : 40백만 원
	350
○ 외교목표별 기획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외교정책 홍보 : 94백만 원 ▪ 사업 추진 관련 지원 : 30백만 원 ▪ 3대외교목표별기획홍보: 226백만 원
	99
○ 온라인 (블로그, PCRM)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고객(PCRM) 서비스 : 17백만 원 ▪ 블로그 기자단 취재지원비(국내외) : 0.1백만 원×40명×12회=48백만 원 ▪ 온라인 공모전 포상품 : 10백만 원 ▪ 블로그 이벤트 : 3만원×40명×20회=24백만 원
	72
○ 공보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단/대변인 교류사업: 4회×출장비 5백만 원=20백만 원 ▪ 개도국언론인 초청: 5회×4.2백만 원=21백만 원 ▪ 기자단 간담회 : 31백만 원
	130
○ 다국어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다국어 콘텐츠 확충 : 130백만 원

자료: 외교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미국 공공외교 관련 입법례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국 회 도 서 관 장

I. 개요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외국의 국민들과의 직접소통 및 지역사회 현장 활동 등을 통하여 국가 이해관계 촉진 및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⁸⁾.
- 미국은 냉전체제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하던 해외공보처(USIA⁹⁾)가 1999년 국무부(State Department)로 통합된 후 국무부가 공공외교를 담당하며, 조직 내에 공공외교담당 차관을 둬. 그 외에 국방부, 해외개발청(USAID)¹⁰⁾, 방송위원회(BB G¹¹⁾) 등에서도 공공외교를 수행함.

II. 공공외교 관련 입법례

-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국무부 기본권한법」,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법」,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법」, 「미국 국제방송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임.
※ 참조 : CRS 보고서 “미국 공공외교의 배경 및 현안¹²⁾”

1. 「국무부기본권한법」(State Department Basic Authorities Act of 1976)¹³⁾

- 현행 미국 연방법률인 미연방법전(USC)¹⁴⁾ 제22편(외교편) 제38장(국무부) 제2651a조 이하¹⁵⁾에 규정되어 있음. 특히 제2651a조와 제2732조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국무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법률조항 원문은 첨부파일 [미국_1(1)] [미국_1(2)]참조 >

- 제22편 제2651a조는 공공외교담당차관(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의 업무를 규정함.

8) CRS 보고서 “미국 공공외교의 배경 및 현안(U.S. Public Diplomacy: Background and Current Issues)”, 2009년 12월 18일, R40989. <http://www.fas.org/sgp/crs/row/R40989.pdf>

9)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10)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1)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12) 각주 1)과 상동.

13) 1956년 8월 1일 ch.841, 70 Stat. 890.

14) 미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 USC)는 일종의 미국연방법률의 주제별 조항모음형태로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해 제정된 각 법률 조항이 주제별로 재편된 형태의 법전임.

15) 미연방법전 제22편 제2651a조 ~ 제2734조. 제22편 제4301조 이하 규정도 일부 포함함.


원 문	번역문
<p>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Chapter 38. Department of State § 2651a. Organization of Department of State <중간 생략></p> <p>(3)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There shall be in the Department of State, among the Under Secretaries authorized by paragraph (1), an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who shall have primary responsibility to assist the Secretary and the Deputy Secretary in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United States public diplomacy policies and activ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The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 shall--</p> <p>(A) prepare an annual strateg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collaboration with overseas post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regional and functional bureaus of the Department;</p> <p>(B) ensur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program evaluation methodologies;</p> <p>(C) provide guidance to Department personnel in the United States and overseas who conduct or implement public diplomacy policies, programs, and activities;</p> <p>(D) assist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o present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clearly and effectively; and</p> <p>(E) submit statements of United States policy and editorial material to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for broadcast consideration <이하 생략></p>	<p>제22편 외교 및 교류 제38장 국무부 제2651a조 국무부의 조직 <중간 생략></p> <p>(3) 공공외교담당차관 (1)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국무부 내 차관 가운데 공공외교담당차관을 두며, 차관은 국제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정보, 국제 방송을 포함하여, 장관 및 부장관이 미국 공공외교 정책 및 활동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돕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한다. 차관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p> <p>(A) 외국 지점과 협력하고 국무부의 지역·기능 사무국과 협의하여 공공외교에 관한 전략적 연간 계획을 준비함</p> <p>(B) 적정한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의 시행 및 계획을 확보함.</p> <p>(C) 공공외교 정책·프로그램·활동을 시행하고 실시하는 국내외 국무부 인력을 위하여 가이드를 제공함.</p> <p>(D) 국제 개발을 위한 미국 기관 및 방송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 BBG)을 도와 미국의 정책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 또한</p> <p>(E) 방송을 위하여 방송위원회(BBG)에 미국 정책 설명서 및 자료를 제공함.</p> <p><이하 생략></p>

- 제22편 제2732조는 공공외교에 관하여 국무장관의 역할을 규정함.

원 문	번역문
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Chapter 38. Department of State § 2732. Public diplomacy responsibilities of the Department of State <중간 생략> (b) Coordination and development of strategy The Secretary shall make every effort to-- (1) coordinate,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public diplomacy activities of Federal agencies; and (2) coordinate with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o-- (A) develop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strategy for the use of public diplomacy resources; and (B) develop and articulate long-term measurable objectives for United States public diplomacy <이하 생략>	제22편 외교 및 교류 제38장 국무부 제2732조 국무부의 공공외교 임무 <중간 생략> (b) 전략의 조율 및 개발 국무부 장관은 다음에 힘쓴다. (1)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기관 간의 공공외교 활동을 조율하고, 또한 (2) 다음을 위하여 방송위원단(BBG)과 조화를 이뤄 활동한다. (A) 공공외교 자원의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개발 및 (B) 미국 공공외교의 장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 개발 및 구체화 <이하 생략>

2.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법」(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¹⁶⁾

○ Smith Mundt법으로 불리며, 현재 미연방법전 제22편 제1431조 이하¹⁷⁾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률조항 원문은 첨부파일 [미국_2] 참조 >

○ “미국 정보·교육교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무부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방송, 출판, 라디오, 영화 및 기타 정보 미디어 및 정보 센터와 강사들을 통해 미국과 미국인, 미국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해외에 배포하도록 규정함[제1461조].

○ 미국해외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역할을 규정함. 아이디어·정보·교육 및 문화 활동의 교류를 통하여 외국 및 외국 국민들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위하여 미국의 정책·가치·조직·문화를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의 정보·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함[제1461-1조].

16) 1948년 1월 27일 ch. 36, 62 Stat. 6.

17) 미연방법전 제22편 제1431조 ~ 제1479조.


○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으로 구성됨[제1469조].

○ 해외 공공외교 업무에 대한 국무부에 의한 연방재정지원을 규정함[제1475h조].

원문	번역문
<p>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Chapter 1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Subchapter VII. Administrative Procedure § 1475h. Overseas public diplomacy grants (a) Competitive grant procedures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epartment of State shall work to achieve full and open competition in the award of grants for carrying out its overseas public diplomacy functions. (b) Exceptions The Department of State may award an overseas public diplomacy grant under procedures other than competitive procedures when-- (1) such a grant is made under 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commonly known as the Fulbright-Hays Act) [22 U.S.C.A. § 2451 et seq.] or any statute which expressly authorizes or requires that a grant be made with a specified entity ; <이하 생략></p>	<p>제22편 외교 및 교류 제18장 미국 정보 및 교육교환 프로그램 제VII부속장 행정 절차</p> <p>제1475h조 해외 공공외교 지원 (a) 경쟁 지원 절차 본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부는 해외 공공외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모두 공개적인 경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예외 국무부는 다음의 경우는 경쟁 절차가 아닌 절차로 해외 공공외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1961년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법」(일명 Fulbright-Hays법으로 불리는)[미연방법전 제22편 제2451조 이하]에 의한 또는 지원이 특정 단체에게 제공된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법규에 의한 지원인 경우 ; <이하 생략></p>

3.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법」¹⁸⁾(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 일명 Fulbright-Hays법이라 불리며, 현행 미연방법전의 제22편 제2451조 이하¹⁹⁾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률조항 원문은 첨부파일 [미국_3] 참조 >

○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에 대하여 규정함.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육·문화 교류를 통하여 외국 국민과 미국 시민간의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 증진을 목적으로 함²⁰⁾.

○ 국제적 협력 관계 증진을 고려하는 경우, 미국 해외홍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장(長)은 교육·문화의 교류 등을 위한 보조금(grant)이나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음을 제공할 권한을 가짐 [제2452조].

- 교육 교류에 있어서는, 미국과 외국 간에 학생, 교사, 교육자, 교수 등의 방문 및 교류를 위한 재정지원
-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는, 미국과 외국 간에 지도자·전문분야 전문가, 기타 뛰어난 업적자의 방문 및 교류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제 예술 · 드라마 · 음악 · 스포츠 · 문화페스티벌 · 대회 · 회의 · 전시 등에서의 미국 대표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이들 목적을 위해 대통령은 미국과 외국 간의 학습 · 교육·연구 등의 협력을 통한 이해 증진 및 관계 개선을 위하여 문화적 · 기술적 교류를 위한 센터 등을 국내외에 설립할 수 있음.

18) P.L. 87-256 (1961년 9월 21일), 75 Stat. 527.


19) 미연방법전 제22편 제2451조 ~ 제2463조.

20) 풀브라트장학금(Fulbright scholarship)이 있음.

<http://fulbright.state.gov/history/fulbright-the-early-years>

4. 「1994년 미국국제방송법」(United States 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 of 1994)

○ 현행 미연방법전의 제22편 제6201조 이하²¹⁾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률조항 원문은 첨부파일 [미국_4]  참조 >

○ 라디오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 VOA)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6202조].

○ 방송위원단(BBG)²²⁾의 설립을 규정함[제6203조]. 9명으로 구성되며, 국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8명은 상원의 권고 및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가 후원하는 해외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월드넷(Worldnet)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6205조].

21) 미연방법전 제22편 제6201조 ~ 제6216조.

22)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VOA등을 운영함.

<http://www.bbg.gov/about-the-agency/organizational-chart/>

일본의 공공외교 입법례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국 회 도 서 관 장

- 공공외교란 정부 간 외교관계가 아닌 대중매체나 민간관계, 산업 등을 통하여 자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상대국에 심어 상대국 국민의 사고방식을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그 여론의 힘을 빌려 상대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외교방식을 말한다.

- 냉전 종식으로 사라졌던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한 배경에는 9·11 사태가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타국 대중과 교류하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사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 미국 정부는 냉전 후 사라졌던 미공보처(USIA)의 기능을 재인식하여 국무부 안에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직을 신설했다.
 - 중국도 당 중앙 대외선전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04년에 처음 설립된 공자학원은 현재 약 100개국에 340여 개가 운영 중이다.
 -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 등 선진국들도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캐나다, 노르웨이 등 중견국도 자연보호, 세계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공공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또는 재팬 파운데이션은 일본의 외무부 소관 독립행정법인의 하나이다.
 -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제 외국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국제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문화 기타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여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 및 일본의 조화 있는 대외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 일본연구·지적교류, 조사연구·정보제공을 하며, 국내에 교토지부를, 해외 21개국에 해외사업소 23곳을 두고 있다.
 - 일본에는 1972년 특수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년 이를 독립행정법인화하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이 제정되어 2003년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바뀌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²³⁾」

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7호 제정
2004년 6월 23일 법률 제130호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1999년 법률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통칙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이해를 깊게 하고 국제상호이해를 증진하며, 문화 기타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함으로써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 및 일본의 조화 있는 대외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기금은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에 둔다.

제5조 (자본금) ①기금의 자본금은 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출자된 금액으로 한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제5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출자의 목적으로 기금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23) 원문은 <http://www.houko.com/00/01/H14/137.HTM>에 있음.

④기금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자액에 의해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출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전항에 규정하는 평가위원 기타 동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조(명칭의 사용제한) 기금이 아닌 자는 국제교류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 ①기금에 임원으로서 그 장인 이사장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기금에 임원으로 이사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제8조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①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통칙법」 제19조제2항의 개별법으로 정하는 임원은 이사로 한다. 다만, 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로 한다.

③전항 단서의 경우에 「통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하거나 그 직무를 하는 감사는 그 동안 감사 직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1907년 법률 제 45호) 기타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3장 업무 등

제12조 (업무의 범위) 기금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물의 파견 및 초빙
2. 해외에서의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및 일본어 보급
3.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4.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기타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5.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정비에 대한 원조,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에 관한 원조 및 이러한 물품의 증여(기금의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한다)
6. 국제문화교류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
7.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제13조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5년 법률 제179호)」의 규정(별칙 포함)은 전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금이 교부하는 조성금(정부 이외의 자료부터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제2조제7항 제외) 중 “각부각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각부각청의 장”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이사장”으로, 동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및 제33조 중 “국가”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으로, 동법 제14조 중 “국가의 회계연도”는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사업연도”로 대체한다.

제14조 (적립금의 처분) ①기금은 「통칙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중기 목표 기간(이하 이 항에서 “중기목표 기간”이라 한다)의 최후 사업연도와 관련되는 「통칙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외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해당 중기목표 기간 다음의 중기목표 기간에 관련되는 「통

칙법」 제30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다음 중기목표 기간에 제12조에 규정하는 업무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②외무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외무부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제1항에 규정하는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래도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전 3항에 정하는 것 외에 납부금의 납부절차 기타 적립금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용자금) ①기금은 업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그 운용으로 얻기 위하여 운용자금을 마련하고, 부칙 제3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외무장관이 제시한 금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출자한 금액 및 운용자금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②전항의 운용자금(이하 “운용자금”이라 한다)은 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헐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용자금의 운용) ①「통칙법」 제47조 및 제67조(제4호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운용자금의 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통칙법」 제47조제3항 중 “금전신탁”은 “금전신탁으로 원금보전의 계약이 있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지불이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외화표시채권(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을 말한다. 다음 항 및 제18조제2호에서 같음)의 취득에 의해 운용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외화표시채권의 종류, 외화표시채권의 취득에 의해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의 한도액 기타 외화표시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잡칙

제17조 (긴급 필요가 있는 경우의 외무장관의 요구) ①외무장관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국제회의 기타 국제협조 기구 포함)의 요청 등으로 외교정책 수행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제12조에 규정하는 업무 또는 기금의 외국 사무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은 외무장관으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무장관과의 협의) 외무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외화표시 채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

제19조 (주무장관 등) 기금에 관련되는 「통칙법」에서의 주무장관, 주무부 및 주무성령은 각각 외무장관, 외무부 및 외무성령으로 한다.

제20조 (국가공무원 숙사법의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숙사법(1949년 법률제117호)」의 규정은 기금의 임원 및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벌칙

제22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금의 임

원에 대하여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헐어버린 때
4. 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통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운용한 때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외무장관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자금을 운용한 때

제24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

<http://ja.wikipedia.org/wiki/%E5%9B%BD%E9%9A%9B%E4%BA%A4%E6%B5%81%E5%9F%BA%E9%87%9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7/2012020702616.html

<http://blogs.yahoo.co.jp/wood72046/34217808.html>

<http://logsoku.com/thread/hatsukari.2ch.net/news/1314450154/>

**우리나라 공공외교 문제점 및
활성화 관련 언론보도**

▶ 연합뉴스 [2012.7.29] 정부 "외국인 마음을 잡아라"..공공외교 박차

공공외교 포털 구축·문화공연단 파견사업 등 추진

"외국 대중의 마음을 잡아라."

외교통상부가 내년부터 공공외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작년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하고 올해 문화외교정책과의 명칭을 공공외교정책과로 변경한 데 이어 신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관련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예산 당국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예산은 공공외교 포털사이트 구축과 재외 공관 공공외교 사업, 대국민 공공외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공외교는 전문 외교관만이 아닌 민간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이 동참하는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포털을 구축, 내부적으로 공공외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민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외국인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할 때 필요한 동영상이나 글 등을 공공외교 포털에 올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외교부의 계획이다.

또 공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참여 사업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문화원이 없는 지역에 문화 사절단 형식의 공연단도 파견해 '한류'를 전파할 계획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청년 등 각계각층을 민간 공공외교 사절로 활용해 우리의 정책을 홍보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등의 대국민 공공외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각국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 대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2012.7.27] 중앙공무원교육원, 중국국가행정학원과 양해각서 체결

양국간의 교육훈련, 인적자원교류 활성화 기대

중앙공무원교육원(윤은기 원장)은 7월 27일 중국국가행정학원(양문명(楊文明) 기율김 사위원회 서기(차관급))과 한·중 공무원교육 훈련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0년 양기관간 양해각서 종결 이후('05~'10, 5년간 체결) 재추진되는 것으로서, 그간 소원해진 양기관의 관계를 재개하고 양국 중앙공무원 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95년~'07년 : 255명 중국공무원 교육

또한, 중국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체결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의 공공분야 경영혁신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험 등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전자정부 등 우리의 선진 행정시스템 소개를 통해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MOU를 체결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증대하여 왔으며, 우리 정부의 외교업무 강화를 지원하는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인일보 [2012.7.25] '親수원' 해외도시 협력 강화한다... 미리 보는 향후 2년 시정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단순한 교환 방문서 탈피 전용거리 조성 확대 추진 주민에게 소통 공간 제공

이달 초 엠테영 수원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걸고 출향한 '엠테영 호'는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를 이끌어오면서 지난 2년간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그동안 뿌리 깊게 내려오던 행정중심, 관료중심의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행정의 가치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해 크고 작은 성과를 올렸으며, 또 다른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자매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엠테 시장의 '브라질 구상'을 통해 향후 2년간 진행될 시정에 대해 점검해 본다.

■ 수원시와 해외 도시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전 세계 지방 정부의 협력체인 'ICLEI 세계총회'와 '리우+20 유엔 지속가능 지구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던 엠테 시장은 브라질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과 해외 도시들간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엠테 시장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2개 국가 15개 자매도시 간의 단순 교환방문을 지양하고, 해외 유수의 도시들과 구체적인 연구 및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했던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 적극 교류해 교육, 복지, 교통, 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또 해외도시와 외국주재 한국문화원, 유엔, ICLEI 등 각종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영문뉴스레터를 정기발행해 국제사회에 수원시를 적극 알리는 활동과 함께 제3세계 국가도시의 공무원 연수지원을 통해 '친수원파'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 행정시스템의 노하우를 제3세계 국가 도시들에 적극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 및 하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운영 관리, IT를 접목한 전자정부 분야 등 다년간 축적된 수원시의 지적자산인 선진행정시스템의 목록화를 통해 제3세계 도시들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엠테 시장은 "세계도시간의 외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베이징과 도쿄 등 세계도시들과 경쟁하고, 수원을 국제사회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역량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

1970년대부터 브라질 쿠리치바시가 추진해 온 보행자 중심의 도시 모델을 벤치마킹한 염 시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염 시장은 브라질 방문기간에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 도로와 공공 공간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행자 전용거리의 조성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리치바시는 도심 6차로 도로(총 1km 구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 '꽃의 거리'를 조성하고, 거리미술제와 시장을 열어 관광명소로 거듭난 곳이다. 이곳을 둘러본 염 시장은 수원시내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구급차, 우편 차량, 경찰차 등 특수차량 통행만 허용하고 승용차는 우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는 9월 관련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연구소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현재 180여명의 도시설계사와 건축가 등이 참여해 쿠리치바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 시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모든 분야의 연구, 정책의 안정적인 집행에 대한 산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 역시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 산하 연구기관의 설립이 가능해져 조만간 '수원발전연구원(가칭)'이 설립되면 시의 환경과 도시문제에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염 시장은 "지난 상반기 2년간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면, 하반기는 시민들 삶의 변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이 완성될 것"이라며 "민선 5기 정책과제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거둬 '사람이 반가운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12.7.23] 분단이 오히려 외교자산 ... 평화를 팔아라

공공외교 석학 좌담회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외교관으로 활용하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이점을 활용하라, 파괴력 있는 문화로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라... 공공외교 분야 석학 안 멜리슨(네덜란드) 안트베르펜대 교수와 니컬러스 쉘(미국) USC 아넬버그스쿨 교수가 19일 본지와 좌담회를 하면서 한국이 소프트파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처방전이다. 이들은 외교통상부와 중앙일보 후원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연 ‘한국공공외교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좌담회 사회는 김우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가 맡았다.

▶사회=한국이 최근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한 나라)에 가입했다. 한국이 나아갈 공공외교 방향은.

▶멜리슨=전통적 중견국은 캐나다·노르웨이였다. 이젠 비유럽 중견국이 중요해지고 있다. 평범한 한국 남녀에게 물어보라. 한국의 특수성을 북한 문제와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등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서 찾는다. 이게 한국의 파워다. 한국은 그 이웃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약점처럼 보이지만 강점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문화 시대에 필리핀·베트남 등에서 온 이민족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켈=한 나라의 힘은 이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관리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전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대중이 선호하는 연사라면 누구든 외교관이다. 세계 각국에 대사를 두는 것보다 영국의 대사들처럼 한 주제에 대해 트위팅하는 등 SNS 소통도 한 방법이다.

▶사회=한류와 경제·민주화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코리아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켈=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안해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건 난센스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을 때 한국이 이 이야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 ‘평화와 재건’의 좋은 예다. 햇볕정책도 국제사회에선 거대한 소프트파워였다. K팝·드라마·태권도는 많은 국가가 부러워하는 문화지만 이를 통해 더 파괴력 있는 평화 얘기를 전달해야 한다. 인도처럼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문화적으로 깊은 나라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멜리슨=세계는 일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실망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좋은 방향이다. 원조해 주면서 인권이나 민주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도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공외교=미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가 2004년 제시한 ‘소프트파워’를 전하기 위한 외교 행위. 지식·문화·민간 외교 등이 꼽힌다. 경제·군사 등 하드파워에서 최강국을 자랑해온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반미 세력과의 공공외교에 눈뜨게 됐다.

▶ 아시아투데이 [2012.7.21] 공공외교 활성화 국민제안 23일 시상식

외교통상부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23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160건이 접수됐으며, 대학생 권영현씨(최우수작) 등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모한 아이디어는 공공외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더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세계에서 ‘매력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일보 [2012.7.19] 경주엑스포·세계물포럼 추진 탄력

경북도, 외교부와 MOU 체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과 2015 세계물포럼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외교통상부장관실에서 외교통상부·경북도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양측간 국제분야업무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경북도와 외교통상부는 양해각서를 통해 내년 터키에서 개최되는 이스탄불-경주문화

엑스포와 2015년 대구·경북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또 국제개발 협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퀴즈 온 코리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에 관한 퀴즈쇼)를 공동 주최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경북도가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외교통상부와 자치단체간 체결로는 강원도에 이어 전국 5번째로 지자체와 외교통상부간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은 전통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산실이며 자연, 경제, 농업에 있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통상부와 상호 협력해 경북을 통해서 세계 속에 명품 한국을 드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12.7.13] [김영희 칼럼] 푸틴의 동방정책, 황금 같은 기회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유치하려고 할 때 러시아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계의 친서방파들이 일제히 반대했다. 그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두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푸틴의 속셈을 알았다.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을 전통적인 유럽 중시 외교를 재조정해 아시아 중시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계획했다. 푸틴은 부총리 이고리 슈발로프에게 시베리아·극동 개발을 담당할 자치주개발공사의 청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개발공사는 국내외 민관 투자 1000억 달러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전 재무장관 알렉세이 쿠드린과 현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가 반대에 앞장서는 바람에 민간기업들이 투자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푸틴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나 세력이 없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그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베리아·극동 개발에 대한 유럽파들의 반대를 누르지 못하고 타협했다. 자치주개발공사를 만들려던 야심적인 계획을 수정, 극동개발

부를 신설해 하바롭스크주 지사와 중앙정부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빅토르 이샤예프를 장관에 임명하고 시베리아 개발에 관한 한 재무장관에 버금가는 권한을 맡겼다. 푸틴의 비전으로는 APEC 회의가 열리는 루스키섬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다리는 러시아와 아시아의 접점을 상징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장 시설은 신설된 국립극동대학 캠퍼스로 활용해 이 대학을 신홍 명문으로 키울 생각이다.

푸틴의 이런 동방정책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아시아 중시(Pivot)와 중국의 부상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요 기회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비행기로부터 불과 2시간 거리의 방대한 극동·시베리아에서 열리는 외교·안보·경제적인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러시아 지한파들의 대답은 충격적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소장 미하일 티타렌코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서울을 왕래하면서 한양대의 김연준 총장, 조지워싱턴대의 김영진 교수, 샌프란시스코의 방찬영 교수들과 함께 한·소 수교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헌신한 한·소 수교의 일등공신이다.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만난 티타렌코는 수교 이후의 한국의 대러시아 외교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불평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갖고 있던 환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종단해 남북한을 잇는 가스관 건설을 포함한 시베리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시베리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개입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티타렌코는 러시아 정부와 학계의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인 노다리 시모니아와 빅터 슴스키도 동아시아재단이 출간하는 ‘글로벌 아시아’ 2012년 여름호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남북 종단 가스관 계획이 논의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합의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미국은 방해로 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한·러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다.

장기집권의 궤도에 올라선 푸틴은 러시아 운명의 적어도 절반을 극동·시베리아 개

발에 걸었다. 친서방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어도 푸틴은 주춤거리면서 동방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아시아 등장은 궁극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 전략적으로 아시아에 복귀한 미국과 함께 파워 트로이카를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외교·안보의 생존전략을 미국이라는 광주리 하나에 쓸어담았다. 그러다 반짝 중국 바람이 불자 ‘중국 외교 강화다!’ 하고 법석을 떨지만 미국의 족쇄를 못 벗고 있다. 요즘 우리는 미국 편향외교의 부작용을 많이 목격한다.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번영 전략은 대미국·중국·러시아 외교의 균형 위에서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미 외교는 현상을 유지하고, 대중 외교는 중층적인 공공외교를 최대한으로 확산시켜 긴 시간을 두고 과실을 따야 한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베리아에서 미국 눈치 안 보는 경제외교를 펴야 한다. 시베리아를 교두보로 러시아를 활용하면 대북한 지렛대를 하나 얻고 중국의 과도한 역할을 줄일 수 있다.

▶ 아시아경제 [2012.7.11] 아세안·한중일 쌀 비축제도 12일 발효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 10개 국가가 약속한 비상 쌀 비축제도가 12일 발효된다. 각종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쌀을 수급하기 어려울 때 서로 지원해주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농림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만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한국은 15만t을 원조하겠다고 약정했으며 중국과 일본이 각각 30만t, 25만t씩, 태국(1만5000t)을 비롯한 아세안 10개 국가가 합쳐 8만t을 내놓기로 해 총 78만7000t 정도가 모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나 아세안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쌀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이 비축분을 장기차관 형태나 무상으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앞으로 5년 내 한중일이 각 100만달러씩 납부해 마련된다.

정부 당국자는 "역내 국가들간 협력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비축제도"라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한중일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2012.7.11] [시론] 인니를 ‘기회의 땅’ 만들려면"**

지난 7월 4일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한국 기업인과 인도네시아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 포럼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 간에 양국 기업의 CSR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진 점이다. 이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가 주재국의 경영자단체와 맺은 최초의 CSR 관련 협력약정으로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출범을 앞두고 양국 기업이 적극적인 CSR 활동 추진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들도 함께 불거져왔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서 임금체불, 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공장주의 야반도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경제 세미나에서 베트남 측 발표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베트남 FTA 추진에 부정적인 이유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노사분규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CSR 이행에 문제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FTA를 통해 더욱 늘어나면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국가다.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인구 2억4000만 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갖고 있다.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누구에게나 쉽게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들어 수입자 인증제도, 농산물 수입규제, 원광석에 대한 20% 수출세 부과를 시행하는 등 경제민족주의·국내산업 보호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

배 기간부터 외국기업의 자원수탈과 환경파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활동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좋은 관계 맺기가 절실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15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80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코린도·키데코(삼탄)·삼익약기·미원·신성통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CSR 활동으로 신뢰와 명성을 쌓아온 기업도 있다. 부통령실에서 만난 범정부 빈곤감축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지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CSR 활동을 통해 빈곤 감축 등 인도네시아의 개발목표에 기여한다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경제통상정책과 공적개발원조(ODA)정책, 현지진출 기업의 이해관계자 공생경영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CSR 활동, 인도네시아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등이 새로운 협력모델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행사는 외교통상부가 작년부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글로벌 CSR’ 사업이 한 단계 진일보한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존의 업무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보다 풍성하고 효과적인 경제통상외교가 진전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중앙일보 [2012.7.10] [글로벌 아이] 웨이보와 외교를 하자

권력 세기로 유명한 중국 공무원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 첫째가 ‘웨이보(微博·트위터)’요, 둘째가 ‘신팡(信訪·신문고)’이다. 전자는 민(民)의 칼이고 후자는 관(官)의 칼이다. 며칠 전 신팡 처리를 맡고 있는 한 공직자와 저녁을 하다 물었더니 요즘은 첫째도 둘째도 웨이보가 가장 무섭다고 했다. 신팡은 당 기율위 감찰부에서 담당하는데 전국 공무원들의 무능 행정과 비리가 접수되는 첫 창구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매월 3000여 건을 처리한다. 말하자면 현대판 암행어사다. 한데도 웨이보가 이보다

무섭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웨이보의 힘은 귀류(過濾·필터링)의 반작용에서 나온다.” 중국 중앙TV(CCTV)의 한 사회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제도권 언론이 모두 감시를 당하니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웨이보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중·응집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웨이보는 2억5000만 개. 지난해 대비 세 배 늘어난 숫자다. 이런 추세면 연말에 3억 명을 넘을 게 분명하다.

웨이보의 힘은 최근 쓰촨(四川)성 스팡(什<90A1>)이라는 곳에서 폭발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구리합금 공장의 기공식 직후 대학생 몇 명이 웨이보에 환경문제를 지적했고 이어 1만 명이 넘는 주민시위로 확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장건설 취소 정도로 봉합됐을 문제가 이번에는 당서기 면직으로까지 이어졌다. 행정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앙정부 허가를 받은 공장건설을 막고 행정 최고 책임자를 낙마시킨 권력은 웨이보가 유일하다. 사정이 이러니 중국 각 행정단위의 인터넷 사이트는 정무웨이보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방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모두 웨이보를 통해 대민 접촉을 하고 있다. 각 직종별 지도자 10만여 명 역시 개인적으로 웨이보로 주민들과 소통한다. 이 정도면 웨이보는 이미 공산당에 버금가는 또 다른 권력이다. 당연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문제로 영향력이 뻗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괴선박이 중국 어선 3척을 납치했을 때 북한이 조건 없이 선원들과 배를 되돌려 보낸 데는 웨이보에서 쏟아지는 대북비난 여론이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인 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중국의 파워 블로거 1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중 네티즌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 남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격론도 벌였다고 한다. 웨이보를 공공외교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제든, 국방이든, 문화든 모든 분야에서 웨이보를 외교파트너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 내 전문 조직도 필요하다. 기업 역시 ‘웨이보 경영=생존’이라는 등식을 고민해야 한다. 주중 미국 대사관이 10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된 웨이보 담당 공공외교팀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일이다.

▶ 서울신문 [2012.7.6] “외교론 부족… 韓·中 민간소통 필요”

中 ‘공공외교 대부’ 자오치정

“정부 간 외교는 자국의 외교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전달 방식으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죠. 이때 국가 간 사회·문화적인 간극을 좁혀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게 바로 ‘공공외교’의 역할입니다.”

‘중국 공공외교의 대부’ 자오치정(趙啓正·72)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 겸 시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 주최 포럼에서 “인터넷 등으로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글로벌 시대에는 정부 간 외교 못지않게 다른 나라와의 소통을 도와주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학기술대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한 자오 주임은 1990년대 푸둥(浦東)관리위원회 주임으로 상하이(上海)시 개발을 지휘했고 상하이시 부시장,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공보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국가의 대내외 언론 및 홍보를 관장하는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을 맡은 이후 중국 공공외교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인들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가치관·신앙·사유방식·생활방식이 다른 만큼 서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죠. 그렇다 보니 어떤 사안을 놓고 자국의 사정과 입장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충돌까지 빚게 됩니다.” 자오 주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와는 다른 채널인 경제·사회·문화·과학·언론·체육·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 민간단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외교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소통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한·중 양국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실정에 맞는 공공외교 방안을 개발해 추진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대학신문 [2012.7.4] 하태운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글로벌 교육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

한국어능력시험, 정부해외인턴사업, NEAT까지 맡아 추진

문화의 한류를 교육의 한류로 이끄는 노력 중요

“국가간 교육·인재교류의 중심역할 해나가겠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려는 외국 학생들이 늘고 있다. 드라마로부터 시작돼 K-POP을 중심으로 돌풍처럼 세계를 휩쓴 한류 덕분이다.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교육과 접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만은 관건이다. 해외 입학자원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우리 대학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취업압박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모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국제교육 교류, 정부해외인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하태운 원장을 만난 이유다.

- 부임한지 8개월에 접어든다. 그간 어떤 일에 집중했나

“전직원들과 최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특히 공식적인 업무는 물론 단소 배우기나 요가특강 등 자유스런 모임을 활성화해서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월중 회의도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타부서의 업무의 이해를 위해 전직원이 참석하는 형태로 바꿨다.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 식사 후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직원들로부터 미처 몰랐던 좋은 의견이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애정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 국립국제교육원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국립국제교육원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적 추세와 국가적 수요에 맞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제교육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 산하 글로벌 교육서비스 전담 기관이다. 사실 최초 설립 목적은 재외동포 교육이었다. 재외동포 2~3세의 고국 초청사업과 한글교재 발간·배포 사업이 그것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유학생 사업과 해외 인재 초청을 위한 정부초청 장학생 사

업, 국내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감각을 키워 해외연수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해외인턴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개발 운영사업도 맡았다. 현재 국제교육 교류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국가 장학금 관련 27개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 사업 성과들은 어떠했나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과 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은 미국 중·고교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해 한국어 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한국어 채택학교가 점차 늘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내 학교에서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유학생들이 한국유학을 좀더 편하고 쉽게 올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korea.go.kr)을 구축한 것도 성과다. 외국학생들이 원스톱으로 해외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유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은 물론 법무부와도 연계해 대학정보와 입학신청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K-POP을 중심으로한 한류열풍을 어떤 식으로든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할텐데

“최근 BBC와 CNN 등 세계 주요언론에 보도되는 K-POP에 대한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분야 뿐 아니라 이제 문화에서도 세계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의 경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고 한국어능력시험은 작년에 전세계 49개국 163개 지역 12만 여명이 응시했을 정도다. 올해는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의 한류를 교육의 한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젊은 인재들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교류 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와 ‘한류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력 MOU’를 체결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에서 열리는 한국 유학 박람회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다양한 한국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홈스테이사업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해외인턴사업, 아직 생소한 대학 관계자와 대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

“정부해외인턴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8개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사업들을 정책시행의 효율화와 수요자의 편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통합운영하기 시작했고 중심통합운영기관으로서 수행 총괄을 우리가 맡고 있다. 올해는 8개 부처 16개 해외 인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지원홈페이지(www.ggi.go.kr)의 통합운영을 비롯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해외실무현장에서 현지직업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이라크 대사를 역임했다.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한다면

“일본, 남아공,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외교에서나 사람사는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 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다. 주 이라크대사로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주재 미국대사가 전 주한 미국대사인 크리스토퍼 힐이었다. 한번은 힐대사를 한국 대사관저에 초청했는데, 한국에 근무했을 때 순두부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한국에 다녀오는 직원을 통해 재료를 공수해서 정성스럽게 순두부식사를 대접했다. 그후로 힐대사와는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한국의 이라크 외교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가 집약돼 나타났다고 본다. 특히, 올해 초 조직인사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내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받았다. ‘온라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계화의 추세에 맞는 다양한 글로벌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등도 다같이 인정받은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 국비유학에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7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부터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적 지역 연구와 순수기초학문연구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사회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유학시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100명의 국비유학생들을 배출했다”

- 국립국제교육원의 비전을 제시하면

“국내외 국제교육 교류의 컨트롤 타워로서 글로벌 교육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교육외교활동 강화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격의 향상 등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됐다. 교육분야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라고 본다. 특히, 우리 교육의 강점과 이를 통한 인재양성, 국가발전의 노하우를 많은 개발도상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간 교육과 인재교류의 중심역할을 해나가겠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수행해온 재외동포 교육을 비롯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국제장학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국제교육 수요를 적기에 발굴·수용하고 글로벌 교육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기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멘텀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교육의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글로벌화 확대 추세에 맞춰 △국제간 교육교류의 활성화 △국가적 수요에 따른 국내외 글로벌 인재 양성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인재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재외동포교육과 국가장학사업, 국제교육교류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한 몫을 했지만 이루어낸 성과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 국립국제교육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부처에서

마저도 기관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형편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국내외 홍보 마케팅활동을 추진해 사업 수요자 뿐 아니라 일반국민, 재외동포, 외국 유수의 교육 기관에게 까지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세계일보 [2012.7.2] 박원순 “제3세계 국가와 도시외교 강화”

연구센터 만들어 노하우 축적

공무원 연수 등 교류도 체계화

최근 남미 순방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세계도시연구센터를 만들고, 제3세계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체계화하는 등 ‘도시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서울시와 다른 외국 도시들의 관계는 일회적, 형식적,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며 “상수도나 지하철 등 서울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자산을 제대로 수출, 지원,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제3세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립대의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 서울시의 도시운영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실무부서도 기존의 국제협력과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지금 막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외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도시 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인상 깊었던 정책들로 생태와 복지, 교통 분야를 꼽았다.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 재생사업, 상파울루의 공공주택 정책, 쿠리치바의 보행자 우선 정책과 종다양성 문화를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서울도 공원녹지 분야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태, 종다양성 등

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은 없었다”며 “자생동물이 자라는 쿠리치마 식물원 같은 곳을 서울시에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12.6.3] “문화 교류로 지한과 양성… 한국 외교적 파워 높아질 것

8일 취임 100일 맞는 김우상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 4월 중순. 우크라이나 국영지도제작회사 ‘카르트그라피야’의 이리나 루덴코 편집장은 동해 표기를 지지하는 칼럼을 현지 언론에 기고했다. 그는 지도 전문가답게 고지도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동해 표기 주장을 지지했다.

#. 중남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도쿄주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업무를 맡겼던 니카라과 정부가 서울주재 대사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 다니엘 오르테카 대통령의 측근인 오를란도 솔로르사노 통상산업진흥장관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반해 대사관 설치를 건의한 덕분이다.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예전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든 자발적 친한(親韓)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루덴코 편집장과 솔로르사노 장관도 이러한 사례다. 이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하 교류재단) 초청으로 지난 4월 각각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의 친구’임을 자처하고 있다. 루덴코는 외교통상부 산하 교류재단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카타르, 코스타리카 등 4개국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을 찾았으며, 솔로르사노는 같은 재단의 중남미 장·차관 초청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모두 한국과 관련 국제 이슈에 있어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사실 동해 표기 지지나 대사관 설치의 경우 공식 외교채널로는 국제사회에서 동조를 구하기 힘든 사안이다. 교류재단이 이들에게 제공한 것은 한국을 둘러보고 스스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 1일 서울 을지로 교류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김우상(55·사진) 이사장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친구 만들기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국제교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면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파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통적 외교 방식이나 민간단체가 국내에서 반일, 반중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루덴코와 솔로르사노와 같은 친한파 인사들을 많이 양성해야 독도나 동해 표기와 같은 이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이사장의 이런 인식은 최근 교류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 각 분야에 그대로 녹아 있다.

교류재단 사업은 크게 한국학·문화교류·공공외교 3개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한국학 사업은 그가 부임한 뒤 그 내용과 형식이 크게 변모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으로 한국학을 배울 수 있는 ‘이스쿨’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

지난 4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유럽대학에 개설한 한국학 강의 이스쿨은 이탈리아 볼로냐대와 프랑스 파리7대학 등 유럽 7개국 8개 대학 학생들이 즐겨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답게 ‘인터넷강의한국발전상’을 한뼘음으로 홍보하겠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김 이사장은 “후발국가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며,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교류재단은 또 우리 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문화 관련 단체 및 인사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을 소개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35세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국청년간부대표단 150명이 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유럽 최대의 안보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람베르토 찬니에르(58) 사무총장 역시 재단 주최로 서울에서 조찬 강연을 했다.

재단 측은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이사장은 최근 이스쿨 개설과 관련해 체코의 찰스(카를로바)대학을 방문했을 때 20명 정원의 한국어 강좌에 무려 500명이 지원해 대학 측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현장을 목격했다. 다른 유럽 대학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분야에 대한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제교류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선 1972년 ‘일본국제교류기금’을 창설해 활동 중이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또한 최근 세계 곳곳에 비슷한 성격의 ‘공자학원’을 설립하며 친중 인사 키우기에 발벗고 나섰다.

▶ 한겨레 [2012.5.28] [세상 읽기] 종북파·종미파를 넘어서 / 김동춘

동학군과 의병을 극히 잔혹하게 토벌하던 관군들은 일본군에게 총 한번 제대로 쏘지도 못하고 강제병합으로 하루아침에 해산되고 말았다. 임진왜란 때 임금과 정부 관료들이 허겁지겁 의주로 피난가자 나라를 지킨 것은 지방의 선비와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김덕령 장군 등 의병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자 나라를 거덜낸 임금과 관료 등 전하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그를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였다. 주자학 원리주의와 명의 재조지은(再朝之恩)에 이견을 보인 내부의 반대파를 절멸시킨 노론계 지배층은 ‘오랑캐’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수십만명의 백성을 청의 노예로 만들었다. 한국 전쟁기 북한의 침략에 아무런 대비를 았던 이승만 정부는 인민군에 마구 밀리면서도 허겁지겁 놀라 국내의 ‘위험’ 인물 수십만명을 불법 검속하여 학살하였고, 온 국민을 미군의 마구잡이 폭격의 목표물로 만들었다.

저항 소수파의 실수와 착오는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그치지만, 내부의 적을 원수처럼 여긴 집권세력의 부패, 공공심의 부재는 나라를 거덜내고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나는 한국의 집권세력이 민족, 국가, 양심, 법치를 내팽개친 것이 ‘종북파’가 이

들 사이비 우파를 대신해서 우파 이념인 ‘민족’을 고집한 이유라 본다. 그런데 남한의 재벌, 교회, 언론, 사학재단의 세습에 침묵하는 집단이 ‘중북파’의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겠다고?

이 정부가 벌인 ‘대북 강경론’, 미국 쇠고기 수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의 실책, 세금 낭비의 ‘자원외교’, 알맹이 없는 핵발전소 수출, 대중국·대일본 외교의 반복되는 실패 등을 보면 과연 이들이 국가를 운영할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중북파’의 위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보다 집권 보수세력의 ‘국민 안보 불감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수십 수백 배 더 크다고 본다. 대미 일변도 외눈박이 외교를 펴다가 이란 석유 수입이 중단될 위협에 처한 일도 그중 하나다. 대중 외교 실패로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은 중국 해적 앞에 ‘국가 부재’를 실감하고, 대일 외교의 실패로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할머니도 계속 ‘국가 부재’ 상태에서 살고 있다.

사실 중북파, 중미파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 ‘중북’ 세력이 실제 있다고 보지만, 대다수는 한국의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친미’ 세력이 있지만 대다수 ‘중미파’는 자신의 이해 때문에 미국을 따르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중북파는 다수파인 중미파의 대타이자 그림자이고, 이 둘은 우리의 덫이다.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경제, 에너지, 환경, 식량 문제에 대해 미래 지향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 불평등과 청년실업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원전 사태는 핵발전 위주인 우리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고리 원전도 위험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는 이제 에너지·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지구의 권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 국내외 사안들은 집권세력이 날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다.

이번 진보당의 자책골은 진보정치세력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외교에 백전백패한 이 정부가 “북한보다 중북파가 더 문제”라며 ‘내부의 적’ 제거에 사활을 걸면 그것은 그들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자책골이 될 것이다.

▶ 뉴스천지 [2012.5.9] 김성환 외교부 장관 “ 한·미·중 외교 관계 확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 ‘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9일 오전 7시 30분 전쟁기념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해 제88회 킴스 모닝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주제는 ‘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정책’이었으며 2012년 한국의 외교·안보환경과 외교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 강연이 진행됐다.

김 장관은 “현재 한국의 외교환경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아·태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아래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돼 일부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며 범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세 가지 외교전략 기조와 4대 핵심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외교전략의 기조는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심화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적극 대처한다’ ‘세계 공영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한다’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를 구현한다’ 등을 골자로 한다.

4대 핵심과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다.

김 장관은 포럼 말미에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에 두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 외교부만 외교를 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외교부와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복합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의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강영규 외교협회장, 이창범 전 스웨덴 대사, 유지호 전 예멘 대사 등이 참석했다.

▶ 프레시안 [2012.5.1] "국제협력 외교를 활성화하자"

[이수훈 칼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위하여 <7·끝>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오늘날 인류는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로 묶여있는 네트워크 공동체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네트워크의 글로벌 공동체에서 특정 국가의 문제는 국가 공간을 뛰어넘어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는 곧장 국가들의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러한 상호의존의 확대와 심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들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간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글로벌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 역시 국제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 참여해 '미들 파워'(middle power)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의 당면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 보편적 문제의 해결에도 발휘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핵심 쟁점현안을 안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도 직결되지만 동북아 지역의 최대 안보 현안이기도 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충전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교적 구상과 실력 발휘는 너무나 중차대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분쟁, 빈곤, 기아, 난민, 기후변화, 자연재난 등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국력에 부합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미들 파워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협력 외교를 통해 평화와 공생의 국제질서 정립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국제협력과 연계시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제협력 외교는 평화협력 외교와 경제협력 외교로 대별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두 갈래의 국제협력 외교는 보편적 지구성 창출을 위한 연성권력(soft power)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평화협력 외교이다. 평화협력 외교는 미들 파워로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위상에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 외교의 일환이다.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를 전개해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선도국'이라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평화선도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각인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의 문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평화와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특수성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국이 평화선도국이 되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은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간 주기적인 갈등과 대립, 상호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한반도에 구조적 긴장과 위협을 배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공존공생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간의 공존과 평화에 위협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역질서에도 막대한 파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에게 있어서 '평화'의 가치는 단순한 규범적·도덕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모두의 운명을 담보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 문제이다.

또한 동북아 국제정치는 한국에게 '평화선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현재 및 미래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은 힘의 대전환에 따른 동북아의 갈등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분단이라는 암운의 그림자를 더욱 키워나갈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국으로서, 나아가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촉진국으로서 한국의 책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책무와 역할은 우리의 당면 문제 해결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국제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국제평

화 기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선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면모를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국제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기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인을 받아내는 데 우군이 될 것이다.

평화협력 외교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와 양자 간 호혜정신에 입각한 '포괄적 대화'를 활성화해 현안 중심의 협의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지역적·국제적 주요 쟁점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평화협력 외교 차원에서 전략적 거점국가를 선정, 이들 국가들과의 평화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국제적 평화기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 외교의 실제적 수단으로서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군의 국제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7월 1000여명의 국제평화지원단인 '온누리 부대'를 창설해 지구촌 곳곳에서 국제평화 정착 및 증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한국이 명실 공히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적인 평화선도국으로 공인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적 이해와 합의하에 '온누리 부대'를 유엔 평화재건위원회에 일정 병력을 할당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의 국제 공인을 받아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에 따른 국제평화 증진활동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온누리 부대'의 국제화와 그에 따른 국제평화활동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병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온누리 부대'의 국제화를 통해 동맹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협력 외교이다. 에너지·자원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한국에게 있어서 양자적·다자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경제협력은 중차대한 협력외교 분야이다. 한국은 경제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네트워크의 글로벌 공동체에서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경쟁으로 인해 지역적·국제적

불안정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확대·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신흥경제성장국들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천연자원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천연자원 경쟁은 지정학적 안보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원, 에너지 조달, 해양운송로, 식량 등을 둘러싼 신흥 경제성장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은 지정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강요하는 가운데 영토 및 영유권 분쟁 유발 및 초국가적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경제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안보 경쟁의 가능성은 세계정치의 중심무대로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을 기점으로 해양, 항공,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은 양자적·다자적, 그리고 지역적·국제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를 융합시켜 나갈 수 있는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지구성 창출을 위한 연성권력과 공공외교의 강화이다. 이는 국제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평화선도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공인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 국제협력 외교 못지않게 민간합동 차원의 공공외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평등,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철학적 담론을 개발해나가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적 담론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평화지향성, 세계의 빈곤국에서 글로벌 중견국으로 성장한 근대화의 성공사례, 민주화 과정에서 체득한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가치, 한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화강국의 이미지 등 한국의 역사와 경험에 입각한 '한국적 담론'을 이론화하고, 이를 지역적·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한국적 담론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국제 홍보 못지않게 민관합동 차원의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과 더불어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외교통상부 [2012.4.30] [보도자료]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공공외교 활성화
화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문 의 : 문화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문화홍보심의관) 김동기 (☎ 2100-7547)

제 목 :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아
이디어를 구합니다

1.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매력을 널리 알려 많은 외국 국민이 우리나라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는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인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외교 활성화 제안을 공모합니다.

※ 공공외교는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활동”입니다. 기존의 전통 외교가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공공외교는 정부 및 국민이 다함께 외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 래 -

□ 공모 주제

?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 공공외교 사업 아이디어(예 : 우리 유학생, 기업인, 동포 등이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한류스타를 한국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외국에 파견)

-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방안(행정 효율 개선 아이디어)

- 기타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

공모 기간 : 2012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공모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제안 방법

? 온라인 접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국민참여-전자민원-정책제안-공모제안)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제안-공모제안)

? 우편? 방문 접수 :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중앙청사별관 외교통상부 공공외교정책과(1009호) (우 : 110-787)

발표 및 시상

? 발표 및 시상 : 2012.6월중

? 시상 내역 : 외교통상부장관 상장 및 상품

(1등 노트북 1명, 2등 태블릿 PC 1명, 3등 문화상품권 10만원권 5명)

문의처 : 외교통상부 공공외교정책과

? 전화 : 02-2100-7543 / E-mail : culturecp@mofat.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외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호소를 통해 외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외교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입니다.

3. 외교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우리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나아가 국민 참여형 외교 모델 구축의 토대로 삼고

자 합니다.

○ 아울러, 이번 제안 공모를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 공공외교 활성화 제안 공모 공고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파이낸셜뉴스 [2012.3.20] [특별기고] 공공외교의 현장에서../정종선 주케냐대사관 참사관

"지성팍 !!! 최고예요."

마사이 전사는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박지성 선수의 자랑에 열을 올린다. 얼마 전 이곳 케냐 야생동물의 왕국이라 불리는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을 다녀오는 길에 들른 마사이족 마을에서 만난 마사이 전사의 허리춤에는 칼 대신 국산 제품의 휴대폰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마음에 휴대폰 제조회사가 코리아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지성팍의 나라라고 답하면서 코리아는 지성팍의 나라여서 좋아한다고 했다. 어떻게 박지성 선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맨유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아래 호텔로 텔레비전을 보러 간다고 했다. 놀라웠다. 케냐의 드넓은 사바나 대초원에서 아직도 자신의 전통을 고집하며 흙집을 짓고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살고 있는 마사이족들에게도 박지성 선수는 익숙한 존재이고 그의 존재가 코리아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익을 위해 주재하는 국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외교관의 몫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 각자가 외교관인 시대가 되었다.

지난 달 이곳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린 세계환경장관회의에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다녀갔다. 회의가 끝나고 정

부대표단은 나이로비 외곽에 자리한 세계 3대 슬럼의 하나인 키베라를 방문해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전달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영화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을 계기로 나눔, 봉사의 일환으로 환경부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게 됐으며 대사관에서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했다. 아이들에게 나눠 준 교복 한 벌은 교복 이상의 의미가 배어 있다. 대표단이 아이들과 마주잡은 손길은 바로 공공외교의 현장이었다. 마사이 전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지성표를 통해 코리아를 알게 되었다면 키베라의 아이들은 마주잡은 대표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코리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따뜻한 가슴과 사랑으로 전해오는 코리아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하버드대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한 나라의 국력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구분하고 전자가 국방과 경제력이라면 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적절히 결합된 스마트 파워가 진정한 국력이고 외교력이라는 것이다.

지난 9·11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정부 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교를 주재국 국민과 직접 소통해 정성과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호감과 친근감을 넓히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로 정책 전환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관들에게 "No"라는 답을 원하면 전화를 하고, "Yes"라는 답을 원하면 직접 만나라는 금언이 있다. 외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하나는 주요 외교사안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곳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서울에서 온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민들이 중심이 돼 만든 봉사단체 등에서도 주재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글 강좌를 운영하고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고 있다. 마음과 정성으로 다가가는 공공외교의 현장이고 주재국 국민과 접점을 넓혀가는 다양한 노력은 주재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외교관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훌륭한 외교 동료이기도 하다.

이번 환경부의 교복 증정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국가이

든, 상대 국가 국민에게 정성과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 전략임을 새삼 깨달았다.

▶ 머니투데이 [2012.3.12] 재외총영사 회의 개막..공공외교 활용 모색

12일부터 4일간 참석자 전체회의와 토론 가져

재외공관의 총영사가 모두 참석하는 재외총영사회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오전 서울 도림동 청사에서 전(全) 재외공관의 총영사와 분관장, 출장소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총영사회의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매일 전체회의와 토론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한국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활용과 한류 확산 및 한식 세계화,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오는 14일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제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갖고 현지 시장정보를 교류하고 15일에는 경찰청 SOS 국민 안심서비스 본부와 파주 시청 민원센터를 방문해 민원 현장도 체험할 계획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교부의 4대 핵심가치인 국익우선과 국민봉사, 인류공헌, 최고지향 가운데 국민봉사라는 가치를 마음깊이 새기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헤럴드경제 [2012.2.1] 한·중 ‘민간외교’ 싹틀까.. ‘지란지교’ 수료식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선 작지만 뜻깊은 강의 수료식이

열렸다. 지난 3개월 동안 중국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국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무료 중국어 교실 수업 ‘지란지교’가 첫번째 수료자를 낸 것이다. 수료증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60명, 강사로 나선 중국 유학생 9명과 한국 대학생 6명은 감사장을 받았다.

‘지란지교’는 겉으로 봤을 땐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가깝지만 먼 한중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고심의 산물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유학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지독한 반한감정을 가지고 가더라. 이를 해결키 위해 마련된 것이 이번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동북공정’부터 최근의 해양경찰 살해사건까지 한·중 사이 외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은 직·간접적 피해자들이었다. 여기에 ‘짱깨’라는 말로 대변되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와 인터넷상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대륙 시리즈’는 중국을 희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은 국내 분위기는 한국을 배우러온 중국 유학생들의 마음 속엔 고스란히 ‘반한 감정’으로 남게됐다.

실제로 강의 초기, 중국 유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더럽고 못살고 예의없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산시성 출신인 중국 유학생 이철(26·산시성)씨는 첫 수업때를 떠올리며 ‘중국은 아주 못사는 나라다. 야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국 생활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참 많이 다뤘다. 그러다가 문득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예민한 부분에 대해선 말 수를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지 4년 된 중국인 유학생 왕방약(21·서울대)씨에게도 한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왕씨는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국내 분위기 상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란지교’는 어떤 의미였을까. ‘주변 사람에게 지란지교 강의를 추천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들은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강추’한다고도 보탰다.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과 다양한 한국사람들과의 접촉이 결국 ‘가깝지만 먼’ 현재의 그리고 미

래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연자로 함께 참여한 한국 대학생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꽤 좋은 편이다. 한가람(21·청주대)씨는 “중국 유학생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게 됐다. 중국에 대해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지(23·경희대 대학원)씨도 “학생들이 처음엔 ‘중국은 더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연예인들을 알려주는 등 학생들에게 다가가자 나중엔 중국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10대 초반의 학생들 역시 수료식 ‘소감문 발표’에서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유학시절 때의 인연으로 지한파가 됐다”며 “중국 유학생들이 가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란지교’ 수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영삼 공공외교대사는 “중국측에도 한국 유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지란지교 방식의 수업을 중국에서 실시하는 안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교육 사업과도 조율해 가면서 중국 유학생들의 다양한 한국 체험을 장려할 계획이다.

▶ 파이낸셜뉴스 [2012.1.24] 문화·원조로 한국 알린다

외교통상부가 올해 새로운 키워드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꺼내들고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외교는 그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문화외교국 산하의 문화외교정책과가 공공외교정책과로 확대 개편, 더욱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외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외교란 정부만 상대로 하던 전통적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를 말한다.

전문외교관만이 아닌 민간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이 동참하는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국제사회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최근 외교 주체가 다양해지고 대중을 상대로 한 '소프트 파워'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외교 또한 자연스럽게 세계 외교가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결과다.

서울대 김상배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지원을 얻는 것이 점점 더 외교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소프트 파워 자원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매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기술, 정보,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활용한 공공외교가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세계화·정보화·민주화 흐름에 발맞춰 공공외교를 정무외교, 경제통상외교와 함께 한국 외교의 3대 축에 포함시키고 공공외교를 전담할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교부 내에서 공공외교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문화외교정책과가 공공외교정책과로 확대 개편돼 공공외교 기획 및 조정, 공보, 지적·인적·문화적 교류, 국제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공공외교정책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관련 동영상 공모전이나 퀴즈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공외교가 무척 중요한데도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공공외교'를 부서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외교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 [2012.1.20]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 개칭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칭은 외교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 증가에 대응해 외교부내 공공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부측은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부내에 공공외교·공보담당차관을, 일본 외무성은 광보문화교류부를 설치하는 등 현재 각국은 조직정비를 통해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 [2012.1.15] 정부, 제 3세계에 '문화 원조' 나선다.**

정부가 '문화강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 3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첫 발을 내딛는다.

외교부는 음악과 미술·무용 등 예술교육을 통해 재능을 발굴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 발룬티어(volunteer)'를 저개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민층 아동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와 비슷한 형태로, 지난 5일 있었던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처음 논의됐다.

최근 외교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복합외교나 공공외교 차원에서 단순히 한류의 해외 확산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저개발국 청소년층에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외교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 인원을 늘려 관현악 합창 공예 서양화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교육 원조를 시작할 방침이다.

또 K팝과 비보이 공연 등 한류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봉사단원도 함께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리더들이 ‘어린 시절 한

국민 선생님께서 피아노와 그림을 배웠다'고 회상한다면 그 자체가 외교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 [2012.1.5] 외교부 "올해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주력"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북핵문제 실질적 진전 확보

중국·일본 등 FTA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외교정책을 수립했다.

외교통상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 남북관계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그랜드바겐' 정책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과는 2+2(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수교 20주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업 등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러시아와는 신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무역규제 해소, 신규공관 설치를 통한 우리기업 지원 등으로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류 확산 등 소프트파워 강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매력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기로 목표를 세웠다.